

## 인류세

인류세 시대,  
역사의 천사

상투어 같은 이 질문을 다시 끄집어낸 이유는 기나긴 팬데믹의 뒤끝에 찾아온 전쟁 때문이다. 유럽에서는 이차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한 나라가 주권국인 다른 나라를 침략한 사건으로 기록될 우크라이나 전쟁을, 단순히 지정학적 갈등이나 강대국 사이의 패권 경쟁의 결과로만 간주한다면, 겉으로 드러난 문제의 외형만을 보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무고한 죽음이 쌓이고 쌓여 대량 학살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도시와 자연이 무참히 파괴되는 가운데, 국토와 시민을 사수하기 위한 우크라이나인들의 비장한 결의와 용맹스러운 저항은 무엇을 말하는가? 신문과 뉴스와 각종 매체를 통해 매일같이 전해지는 사진과 동영상은 감동적인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투쟁이다.

## 생존 투쟁이 모두 기록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기에 죽은 자의 목소리, 살아남은 자의 이야기를 모으고 보존하여 후세에 남기는 일은 지극히 정치적인 일이다. 이것은 새로운 생존 투쟁을 위한 씨앗을 모으는 일이다. 개인의 기억들이 하나둘 모여 공유되면 문화가 되고, 문화는 강력한 생존 전략이 된다. 승리한 쪽에서는 영웅 서사와 민족정기와 같은 프레임이 등장하고, 패배한 쪽에서는 저항의 정신이 자라난다. 문화는 총칼보다도 강하고 질기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히틀러가 집권할 때 얼마나 교묘하게 독일인의 반유대주의 정서를 활용했는가?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나치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치 떨리는 기억을 자극하기 위해 신나치주의로부터의 해방을 언급한 것을 역사의 아이러니로 봐야 할까? 반대로, 하루하루가 9·11 테러의 연속이라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절규는 미국인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실제 전투가 물리적 공간에서 벌어지는 생존 투쟁이라면, 기억 전쟁은 문화적 공간에서 훨씬 더 긴 시간을 두고 일어나는 생

존 투쟁이다. 아무리 정보를 통제하고 왜곡한다고 한들, 심지어 군사적 목적을 달성했다고 하더라도, 한시적이다. 푸틴이 몇 세기 이상 지속될 기억 전쟁에서 승리할 확률은 거의 없을 것이다.

## 3

### ‘탈진실(post-truth)’은 절대 권력자의 도구인가?

아무리 막강해 보여도 권력은 영원하지 않음을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19년간 남한을 통치해 온 박정희 대통령이 측근에 의해 암살된 1979년 10월 26일 다음 날 토요일 아침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당시 중학생이었던 나는 여느 때처럼 아침에 일어나 조간신문을 받아보았는데, 당시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머리기사를 장식하고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 유고(有故)”. 유고의 뜻을 바로 알 수는 없었지만, 어떤 중대한 일이 일어났음을 눈치채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라디오에서는 온종일 무거운 클래식만 나왔고, TV 방송도 일상적이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건이 자세히 보도되었다. 슬프거나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지는 않았다. 가족이나 주위에서도 그런 사람은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이 상황을 반기는 분위기까지 감지되었다. 대통령 선거 등의 정치 일정이 펼쳐지자 10년 넘게 박 대통령의 철권 통치하에 신음하던 정치인들의 활동이 가시화되었다. 이와 함께 한동안 전국 곳곳에서 일어났던 데모는 사라졌다. 냉전 시대에 분단된 한국에서 태어나 1970년대 철저한 좌우 이념 대립에 입각한 ‘유신 교육’을 받고 있던 나에게 이런 변화는 해석을 초월하는 사실로만 다가왔다. 그래도 느낌은 있었다. 통치자를 잃은 나라가 위기 속으로 빠져들어 간다는 생각을 들지 않았다. 적어도 1980년 5월 비상계엄령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대학 휴교령이 선포되며 언론과 정치활동이 통제 될 때까지는 그랬다. 군부에 통제된 언론은 광주에서 일어난 시위로 인한 무정부 사태와 이를 진압하는 계엄군의 활동을 보도했다. 이렇게 ‘광주 사태’는 새로운 군부독재의 등장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탈진실은 다시 일상이 되었다.

4

**왜 어떤 폭력은 정당하거나 적법하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은가?**

독재자인 대통령을 살해한 자는 그다음 날 바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몇 달 후 사형되었다. 한편 광주에 투입된 공수부대원들에 의해 살해된 학생들과 시민들은 ‘폭도’로 낙인되었다. 첫 번째 사례에서는 폭력 행위에 대한 수단의 적법성과 목적의 정당성이 모두 부정됨을 볼 수 있다. 암살자는 법정 최후 진술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독재하에 더 많은 국민의 희생을 막아보자는 동기에서 거행한 혁명적인 일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여기에 설득된 판사는 없었다. 사형이란 폭력은 법보존적(law-preserving)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로 간주되었다. 두 번째 사례는 폭력의 적법성이 계엄이란 비상사태를 주도한 군부 지도자들에게서 나왔고 이들이 정권을 획득해 정당성을 담보하는 법정립적(law-making) 성격을 보여준다. 즉 군부정권의 정당성은 광주에서 자행된 폭력의 정당성과 애초부터 연계되어 있었다. 그러기에 폭력의 잔혹함과 전개 과정이 드러나면서 정권의 기반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동력은 바로 여기서 자양분을 얻을 수 있었다. 그 결실로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 광주에서의 폭력을 승인하고 지휘했던 군지휘관들은 재판에 회부되어 판결을 받았다. ‘폭도’라고 불리던 희생자들은 늦게나마 ‘시민군’으로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다. 여기서 폭력의 정당성이 시차를 두고 부정될 수 있고, 따라서 폭력의 범정립적 기능도 역사적으로 재평가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희망이 있다는 것이다.

독일 제1공영방송(ARD)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Jürgen Hinzpeter)는 일본 특파원으로 근무하던 중 녹음 담당 기자와 함께 신분을 숨기고 광주에 잠입해 1980년 5월 20일과 21일 사이에 벌어진 일들을 촬영했다. 시민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는 시민군들의 모습, 비무장한 시민들에게 발포하고 잔혹하게 진압하는 계엄군의 모습, 수많은 희생자의 모습을 필름에 담아 일본을 거쳐 독일 본사에 전달해 22일 저녁 뉴스에 방영될 수 있도록 했다. 그는 23일에 잠시 계엄군이 시민군에 밀려 후퇴한 사이 광주에 다시 잠입해 취재를 했다. 힌츠페터의 취재 필름을 편집해 만든 다큐멘터리 <기रो에 선 한국>은 80년대에 대학가를 중심으로 비밀리에 상영되었다.

이 말은 독일 출신의 유대계 철학자이자 비평가인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이 1921년에 쓴 「폭력비판을 위하여」라는 에세이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문구이다. 이것을 에세이의 첫 문장과 연계해서 읽으면 그가 왜 역사에 대한 철학적 고찰을 언급했는지 명확히 드러난다. “폭력 비판이라는 과제는 그 폭력이 법과 정의와 맺는 관계들을 서술하는 작업으로 돌려서 말할 수 있다.” 벤야민은 목적의 정당성이 수단의 적법성을 담보한다는 자연법(Naturrecht)적 관점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이 자연법적 관점은 부당한 목적을 위해 남용하지만 않으면 괜찮다는 전제하에 폭력 사용의 정당성을 부여한 것으로, 프랑스 혁명 중에 자행된 테러와 공포정치의 이론적 근거가 되기도 했다. 이후에 다윈의 진화론을 따르는 이들은 자연선택 이외의 폭력을 원초적이며 적절한 생존경쟁의 수단으로 보았는데, 벤야민은 폭력의 적법성을 자연의 생물계에서 찾는 시도가 종종 조야한 법철학적 도그마를 가져온다고 비판했다. 이에 비해 실정법은 폭력을 역사적으로 생성된

결과로 보기 때문에 폭력이라는 수단이 어떤 상황에서 승인 되거나 승인되지 않는지를 분석할 여지를 제공한다.<sup>2</sup>

벤야민은 실정법의 구성주의적인 관점을 폭력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지만, 개별 폭력 사례에서 법보존적/법정립적 기능이 변증법적으로 작동하는 과정을 미시적으로 밝히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거시적으로 이 두 기능의 긴장 관계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즉 “새로운 폭력들이 승리하거나 예전에 억압되어 온 폭력들이 지금까지의 법정립적이던 폭력에 승리해 그로써 새로이 몰락할 새로운 법의 근거를” 세우는 과정을 고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그는 법에 의존하는 폭력들처럼 그 법이 의존하는 폭력의 총체인 국가권력을 “탈정립(Entsetzung)” 할 가능성을 역사에서 찾았다. 인간의 자만과 배신에 분노한 신이 인간에게 형벌을 내려 신-인간관계를 다시 세우려는 신화적이고 법정립적인 폭력이 아니라, 아예 기존의 법체제를 바꿀 정도의 파괴적인 폭력, 신적 내리침의 순간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벤야민은 신적 폭력이 기존 법질서와 정치체제 바깥에 존재하며, 개개인의 사익을 초월하는 것이기에 순수하다고 보았다. 신적 폭력의 예외성, 신화적 폭력과의 차별성에 대해 그는 강조해 말했다.

“폭력이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서도 순수하고 직접적인 폭력으로 존속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다면, 그로써 혁명적 폭력 역시 가능하다든 사실과 함께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어떤 이름으로 인간을 통한 순수한 폭력의 최고의 발현을 증명할 수 있는지가 드러난다.....모든 신화적 폭력, 개입하여 통제하는(schaltend) 폭력이라고 불려도 좋을 법정립적 폭력은 배척해야 마땅하다. 그 폭력에 봉사하는 관리된(verwaltet) 폭력이라고 할 수 있는 법보존적 폭력 역시 배척해야 마땅하다. 성스러운 집행의 옥새와 인장이지 결코 그것의 수단이 아닌 신적 폭력은 베풀어 다스리는(waltend) 폭력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sup>3</sup>

## 6

### 예외상태는 누가 지배하는가?

벤야민은 비록 추상적인 언어로 폭력과 법과 정의의 관계를

논의했지만, 그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일차세계대전과 그 이후에 벌어진 현실 정치였다. 전쟁이 발발하자 프랑스 정부는 계엄을 선포하고 재정 및 통화 관리, 군사 정책 등에 관한 예외적 입법 권한을 의회로부터 얻었고, 영국 정부도 마찬가지로 국토방위법 제정을 통해 전시 경제 통제권과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권리를 획득했다. 미국을 비롯해 유럽의 다른 국가들도 행정부의 예외적인 권한 확대를 도모했다. 특히 전쟁 후 세워진 독일 바이마르공화국은 헌법에 “독일 제국 공공의 안전이 위협받을 때 대통령이 헌법상에 규정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48조)을 둘 정도로 또다시 예외상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실제로 치솟는 인플레이션, 극좌·극우 세력의 극심한 대립, 전후 외교관계의 회복 등, 국내외적으로 중차대한 문제가 산적해 있었기에 바이마르공화국은 처음부터 대통령에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했다. 말하자면 합법적인 독재 통치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었다. 벤야민이 「폭력비판을 위하여」를 쓴 이유는 바로 이러한 예외상태에서 일어날 국가권력의 확대, 즉 막강한 힘을 가진 국가에 의한 신화적 폭력이 가져올 미래에 대한 깊은 우려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에 대항할 아래로부터의 힘, “순수 폭력”의 도래를 기대했다.

독일의 법철학자인 칼 슈미트(Carl Schmitt)도 예외상태

의 법적·정치적 함의에 대해 주목했지만, 그의 관점은 크게 달랐다. 슈미트는 『독재론』(1921)에서 독재의 유형을 “위임적 독재”와 “주권적 독재”로 구분하고, 입법 권한을 한시적으로 위임받아 행사하는 “위임적 독재”와는 달리 “주권적 독재”는 기존의 헌법을 개정할 “제헌 권력”을 부여받은 형태로 보았다. 그리고 이런 독재 권력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법질서를 회복하는 효과적이며 합리적인 기술관료적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어 출판한 『정치신학』(1922)에서는 이런 합리주의적인 설명 방식에서 벗어나 사법적 판단의 결단주의적 관점(사법 판단이 법률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법관의 결정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논리적 추론의 형식이 활용된다는 관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주권자란 예외상태에 대해 결단을 내리는 자이다”라는 책의 선언적 첫 문장에서 볼 수 있듯이, 슈미트는 법 밖에 있는 예외상태를 법질서 안으로 가져오는 데 주권자의 권한이 결정적이라고 간주했다. 말하자면, 법적 예외상태는 기적이 일어나는 상황과 비슷하게 “결단”이라는 비합리적인 활동이 행해지는 상황이며, 주권자는 법질서의 안과 밖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어서 법을 보장하고 구성하는 일뿐만 아니라 법을 유예할 수도 있는 행위자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슈미트의 주요 관심은 주권자의 권한을 통해, 필요하면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예외상태를 법

에 포섭해 법의 권위를 강화하고 안정화하는 데 있었다. 벤야민이 예외상태를 신적 폭력을 통해 아래에서 올라오는 힘을 가지고 새로운 정치체제가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보았다면, 슈미트는 신화적 폭력을 통해 위에서 아래로 국가의 권력을 가지고 법질서를 회복해야 할 상황으로 본 것이다.<sup>4</sup>

## 7

### 예외상태는 오랫동안 우리의 삶을 지배했다. 왜?

한 국가의 법과 정치 구조 속에서 예외상태가 어떻게 발생하고 작동하는지에 대한 벤야민과 슈미트의 날카로운 통찰은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 조르조 아감벤(Giorgio Agamben), 슬라보예 지젝(Slavoj Žižek) 등 많은 정치철학자에게 영감을 불러일으켰고 지금도 논의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 사회의 변모나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여러 나라에서 나타난 국가권력의 확대 현상은 예외상태가 전쟁이나 혁명기를 넘어 일상화되어 주요 통치 패러다

임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북미와 유럽의 근대 국가를 대상으로 상정된 예외상태 개념이 아시아나 남미, 아프리카 국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을까? 벤야민과 슈미트는 식민지 지배와 경영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식민지에서 주권자는 어떻게 정의되며 여기서 법과 정의는 폭력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한 국가의 주권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빼앗긴 식민지는 그 자체로 예외상태이다. 식민 지배를 받는 국가의 국민에게는 차별과 배제가 이미 일상화되어 있고, 폭력은 물리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식론적인 차원에서 행사된다. 말하자면 식민주의는 인종주의와 제국주의라는 두 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와 같다. 이차대전 이후 많은 국가가 식민 지배에서 해방되어 독립국이 되었지만, 인종적 차별과 제국적 영향력은 여전히 남아 있다. 실질적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은 해외 영토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제한적 시민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와 괌, 영국령 포클랜드제도가 이런 예이다. 쿠바 남동쪽 끝부분에 있는 관타나모만(Guantanamo Bay)은 제국주의 시기에 체결한 영구 임대 조약을 근거로 미국이 점유하고 사용하는 곳이다. 1959년 쿠바 혁명 이후 제기된 반환 요청을 미국이 거부했고, 특히 9·11 테러 이후에는 테러 용

의자를 체포해 수감할 수 있는 수용소를 해군기지 내에 설치해 운영하면서 인권의 사각지대로 손가락질을 받은 곳이다. 식민지를 비롯한 이런 예외 지역에서의 법과 정의는 근대 국가의 기본적인 패러다임에서 이미 논외로 치부됨을 알 수 있다. 예외상태 개념의 근거에는 합리주의를 표방하는 근대성을 극복하려는 시도가 분명히 있지만, 근대성을 유지하는 물질·정신적 틀 자체에 대한 심각한 문제 제기는 없었다.

## 8

### 한반도에서는 냉전이 종식된 적이 없다.

서양의 많은 이들은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 사건을 냉전 종식을 알리는 가장 극적인 사건으로 기억할 것이다. 곧이어 1991년에 소련이 해체되었고 소련에 강제 합병되었던 국가들이 독립했다. 우크라이나도 그중 하나다. 이 기억의 연장선에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두고 신냉전의 시작을 알리는 전초전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이전의 냉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국제질서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측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한국인들에게는 그런 경험이 없다. 남한과 북한을 동서로 가르는 DMZ는 여전히 1953년 한국전의 정전협정 이후 실재하는 중무장된 군사분계선이다.

지금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일종의 동병상련이 느껴진다. 강대국 사이에서 겪는 약소국의 설움이라고 할까? 한국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제국들의 영토 확장과 수호를 위한 전쟁터가 되었다. 일본은 청나라,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각각 승리를 거두고 한국에 대한 독점적 영향력을 키워나가다가 1910년 마침내 합병한 이후 36년간을 식민 통치했다. 1945년 이차대전의 종식과 함께 찾아온 해방의 기쁨은 잠시였고, 위도 38도선을 경계로 남과 북이 미국과 소련에 의해 분할 통치되는 상황이 일어났고 결국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지금의 휴전선이 그어진 것이다. 그 이후 남한의 눈부신 발전은 전 세계에 잘 알려졌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019년 4월 대통령 선거를 마치고 투표장을 나서는 길에 한국에 대해 한마디 해달라는 기자의 질문에 답하면서, “민주국가인 한국은 이웃에 독재국가가 있음에도 어떤 성공을 거둘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라고 하면서, 강하고 자유로운 나라로 발전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아주 좋은 본보기”라고 말했다.<sup>5</sup>

이제 우크라이나는 한국에게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강대국에 맞서서 자국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일어나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한다는 것을. 오랜 시간 쌓여온 구조적 폭력에 대항할 신적 폭력을 동원해서.

## 9

“(그들은) 다큐나 사진은 보지만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느끼지는 않는다.”<sup>6</sup>

한정된 시간과 공간상에서 벌어지는 전쟁이나 혁명에서는 폭력이 비교적 잘 드러난다. 하지만 오랜 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폭력은 비가시적이다. 그리고 구조적이다. 법과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일어나며, 자연과 공간을 바꾸기 때문이다. 기후변화가 대표적인 예다. 이것은 한순간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환경을 해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행위의

결과도 아니다.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일어났지만, 그 결과는 자연현상으로 드러난다. 이처럼 잘 보이지 않는 폭력, 비인간에 대한 폭력은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 여기서 법과 정의의 어떻게 논할 수 있을까?

2021년 11월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에서 유엔기후협약 당사국 총회인 COP26이 열렸다. 여기서 탄소중립을 포함한 중요한 의제를 두고 세계 여러 나라의 정부 대표자, NGO, 활동가 등이 갑론을박을 벌였다. 회의장 밖에서는 기후협약의 실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미래세대”의 젊은 학생들이 지금은 비상시국이라고, 제발 과학자의 말을 들으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어떤 이에게는 기후위기가 미래의 문제만은 아니었다. 당장 삶을 위협하고 있는 생존의 문제이며, 오랫동안 수없이 깨진 약속의 문제이기도 했다. 아프리카 남동부 섬나라인 마다가스카르의 환경부 장관은 한 인터뷰에서 절규했다. 세계의 선진국이, 지구온난화의 주범이기도 한 나라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후진국을 기술적,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좋은 말을 하면서도 약속은 지키지 않는다고. 그의 시각에서 볼 때 마다가스카르의 환경 피해는 “자기가 저지르지 않은 일로 인한 희생자”의 문제였다. 그러기에, 이들을 위한 일은 “원조가 아니라 (부자 나라의) 책무”라고 보아야 했다. 그는 유럽이나 북미의 선진국에서

환경에 관심을 두는 지식인에 대해서도, 이들은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느끼지는 않는다”며, “이 문제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이 존재함을 지적했다.<sup>7</sup>

여기서 우리는 생태 식민주의(ecological colonialism) 관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식민주의가 남의 영토를 빼앗고 그곳에 정착해 그곳 사람들을 정신적, 물질적으로 지배하고 착취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 과정에서 식민지의 생태계는 변하고 그렇게 변한 모습이 식민지 지배를 더 공고히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생태 식민주의의 핵심이다.<sup>8</sup> 그 같은 관점에서 보자면, 식민지 지배를 받아왔던 나라는 생태계 파괴의 역사적 유산을 극복하는 과제와 함께 기후변화라는 새로운 형태의 생존적 위협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식민주의자는 그 땅에서 오래 살아온 사람들과 대지와 자연에 대한 관념이 너무나도 다르다. 에메 세제르(Aimé Césaire)라는 프랑스 연방 마르티니크의 시인이자 정치인은 셰익스피어의 희곡 『템페스트(Tempest)』를 풍자해 쓴 글에서 다음과 같이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당신은 대지가 죽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요……”

그렇다면 얼마나 손쉬울까! 죽어 있기에, 그 위를 걸을 수 있고, 오염시킬 수 있으며, 정복자의 발걸음으로 짓밟을

수 있을 테니. 나는 대지를 존중합니다. 살아 있음을 알고 있기에…… 이 낯선 곳에서 나 몰래 어떤 짓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당신에게 나무와 과일과 새와 계절을 가르쳐 주었는데 당신은 무심하군요. 오렌지에서 주스를 짜 마신 후 껍질을 버리듯이.”<sup>9</sup>

정복자의 폭력은 사람에게만 가해진 것이 아니라 대지와 나무와 새와 물과 공기에도 가해진 것이다.

## 10

### 인류세 시대에 희망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있지 않다. 어쩌면 희망은 눈에 보이는 해결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찾아 헤매는 과정에 있는지도 모르겠다.

인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활동으로 인해 지난 한 세기, 특히 1950년대 이후 지구시스템에 큰 변화가 일어났

다. 그 변화가 너무 커서 “인류세”라는 새로운 지질학적 시대를 만들어 불러야 할 정도라는 것은 그 자체로 커다란 경고의 메시지이다.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 기후변화(climate change) 같은 중립적인 용어가 이제 기후위기(climate crisis), 기후비상사태(climate emergency) 같이 상황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용어로 대체되고 있다. 여섯 번째 대멸종이 와서 생명종으로서 인류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말을 멀게 느끼는 사람도 생물다양성이 예전과 비교해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사실에는 쉽게 수긍할 것이다. 기후가 변하고 산림이 파괴되며 산호초가 죽어가면서 야생동물, 새, 물고기가 살 수 있는 서식지가 점점 줄어들어가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 이런 서식지 축소와 생물 다양성의 감소로 인해 인수공통감염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창궐할 수 있었다는 연구도 많이 나오고 있다.

나는 인류세의 뿌리에 폭력이 있다고 본다. 산업혁명으로 인류세가 시작했다고 말하거나 자본주의를 인류세의 원인으로 보는 것은, 인간 활동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다. 인류세는 인간의 인간에 대한 폭력이 자연에 대한 폭력과 연계되어 공간적으로 구조화되고 제도적으로 합리화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생각한다. 이런 과정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그리고 냉전 상황에서 경제개발

경쟁 구도가 뒷받침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했고, 여기에 과학과 기술이 활용되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차대전 이후 일본, 한국, 중국으로 이어지는 순차적인 경제 발전은 동아시아가 인류세의 원인 제공자로 등장하는 모습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과정에 내재하는 폭력은 그 피해가 극적으로 눈앞에서 충격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잘 보이지 않기 마련이다.

미국의 환경인문학자인 롭 닉슨(Rob Nixon)은 그의 저서 『느린 폭력과 빈자의 환경주의』(2011)에서 시간적·공간적으로 한정된 상황에서 벌어지는 폭력은 다른 유형의 “느린 폭력”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느린 폭력은 “눈에 보이지 않게 일어나는 폭력, 시공을 넘어 널리 확산하는 시간 지체적 파괴, 일반적으로 전혀 폭력으로 간주되지 않는 오랜 시간에 걸쳐 벌어지는 폭력이다.”<sup>10</sup> 이런 폭력의 결과로 나타나는 재난은 별로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으며 오랜 세월 속에서 만들어지기에 법적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려울 수도 있다. 여기서 닉슨은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이런 느린 폭력이 만들어내는 “비상사태”를 어떻게 대중에게 알리고 정치적 개입을 유도할 수 있을까? 특히 이런 느린 폭력의 피해자가 자원이 결핍된 가난한 사람들(민족적 배경, 젠더, 인종, 계급, 지역, 종교, 세대, 지역적 차이를 고려한 포괄적 범주)임을 고려할 때 이들의 관점에서 펼칠 환경주의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인가? 최근 70년간 인류세의 현상은 가속적으로 증폭되었지만, 느리고 비가시적인 폭력으로 인한 피해는 더욱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은 행동과 운동의 중심점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를 말해준다. 인류세라는 예외 상태에 대응하려면 벤야민이 설파했듯이 순수하고 자발적인 형태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 11

### 벤야민의 “역사의 천사”는 인류세에 대해 어떤 행동을 했을까?

벤야민은 1940년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기 직전에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라는 노트를 썼다. 여기에서 파시즘과의 투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어쩌면 슈미트의 예외상태 이론에 대항하기 위해, 역사에서 어떤 개념을 가져와야 할지 고민했다.

“억압받는 자들의 전통은 우리가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예외상태’(Ausnahmезustand)가 상례임을 가르쳐준다. 우리는 이에 상응하는 역사의 개념에 도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진정한 예외상태를 도래시키는 것이 우리의 과제로 떠오를 것이다. 그리고 그로써 파시즘에 대항한 투쟁에서 우리의 입지가 개선될 것이다. 파시즘이 승산이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그 적들이 진보의 기치 아래 파시즘을 역사적 규범으로 다루기 때문이다.”<sup>11</sup>

벤야민은 억압받는 자들의 고통을 지속하는 “상례화된 예외 상태”를 비판하고 이들을 해방할 “진정한 예외상태”를 역사에서 찾으려고 했다. 하지만 진보 이데올로기는 답이 아니었다. 이미 파시즘에 포획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벤야민은 파울 클레(Paul Klee)가 그린 <새로운 천사(Angelus Novus)>(그림1)를 “역사의 천사”라고 부르며 우화로 상황을 설명한다. 역사의 천사는 파국적인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 발밑에는 일련의 사건들의 결과로 쌓인 잔해가 방치되어 있다. 천사는 이를 외면하지 않는다. 좀 더 머물러서 “죽은 자들을 불러일으키고 또 산산이 부서진 것을 모아서 다시 결합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천사는 날개를 움직일 수도 접을 수도 없다. 천국에서 세차게 불어오는 폭풍 때문에 계속 뒤로 밀리고 있다. 천



그림1 --- 발터 벤야민이 “역사의 천사”라고 부른 파울 클레(Paul Klee)의  
〈새로운 천사(Angelus Novus)〉.

사의 등 뒤는 미래이고, 그의 앞에서 하늘 높이 치솟는 잔해의 더미는 현재이다. 폭풍은 다름 아닌 “우리가 진보라고 일컫는 것”이라고 벤야민은 냉소적으로 말한다.<sup>12</sup>

우리가 살고 있는 인류세 시대에 “역사의 천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sup>13</sup> 폭력은 하늘과 땅과 바다, 지구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 폭력의 피해는 천천히 쌓여 가다 한순간에 드러난다. 피해가 드러날 때쯤이면 그 누구도 손을 쓸 수 없는 상태다. 폭력은 자유와 평등, 진보와 발전, 안보와 질서 등 가치 충만한 말들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진의는 피해자들을 볼 때 비로소 알 수 있다. 해수면이 오르면 누가 먼저 삶의 터전을 잃을 것인가? 기근이 오고 흉작이 계속되면 누가 먼저 굶어 죽을 것인가? 패권 경쟁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먼저 피를 흘리며 희생될 것인가? 아무런 소리 없이 사라지는 존재들은 (인간과 비인간 모두 포함해) 피해자로 기록되지도 않는다. 이 점이 가장 무섭다. 그러기에 세계 곳곳에서 묵묵히 지구시스템 변화를 관측·분석·해석하는 과학자들, 알래스카 석유 시추와 송유관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들, 물에 잠겨 사라져 가는 마을과 공동체의 문화를 이야기하는 태평양 섬나라 시인들, 멸종 위기에 있는 동식물의 개체 수를 세고 보전 조치를 강구하는 활동가들, 이런 사람들이 인류세 시대에 몰아치는 폭풍에 담대하게 맞서는 역사의 천사가 아

닐까? 이들은 정치적 연대를 요구하지 않는다. 미래도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에게 눈길을 주고 고통을 나누며 잔해를 치우는 가운데 진정한 예외상태의 도래에 희망을 품을 뿐이다.

1

발터 벤야민, 「폭력비판을 위하여」,  
『발터 벤야민 선집 5』 (도서출판 길, 2008),  
115쪽.

2

벤야민의 폭력 개념에 대해선, 김지영,  
“벤야민의 「폭력비판」에 대하여,” 『비평과 이론』  
(2013), 18(2): 39-59을 참조.

3

발터 벤야민, 「폭력비판을 위하여」,  
『발터 벤야민 선집 5』 (도서출판 길, 2008),  
116-117쪽.

4

슈미트의 예외상태 개념과 벤야민, 아감벤 등이  
가졌던 개념과의 유사성 및 차이점에 대해선  
다음을 참조.  
윤재왕, “예외상태와 주권의 역설 - 아감벤의 칼  
슈미트 해석에 대한 비판,” 『강원법학』 (2016),  
47(2): 337-404  
권경휘, “『정치신학』에 나타난 “예외상태”에  
대한 슈미트의 이해방식,” 『법학연구』 (2017),  
20(3): 189-222.

5

“우리도 한국처럼 광고까지,” 〈조선일보〉  
(2022. 2. 27), [https://www.chosun.com/  
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2/02/  
27/GHWBBIHOKHRFJHGXIX27PB7Q4OI/](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2/02/27/GHWBBIHOKHRFJHGXIX27PB7Q4OI/).

6

Patrick Greenfield, “Madagascar paying  
price for cheap European flights, says  
climate minister,” *The Guardian* (Nov.  
6, 2021). [https://www.theguardian.com/  
environment/2021/nov/06/madagascar-  
paying-price-for-cheap-european-flights-  
says-climate-minister](https://www.theguardian.com/environment/2021/nov/06/madagascar-paying-price-for-cheap-european-flights-says-climate-minister).

7

위의 글.

8

“생태식민주의”의 주요 관점은 크로스비의  
“생태제국주의”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  
엘프리드 크로스비, 『생태제국주의』  
(지식의 풍경, 2000), 안효상 옮김.

9

Aimé Césaire, *A Tempest*, (Caliban: 1.2.124-  
147) (Theater Communication Group, 2002  
[1969]). Translated by Richard Miller. 인용  
문장의 국문 번역은 박법순이 함.

10

롭 닉슨, 『느린 폭력과 빈자의 환경주의』  
(에코리브르, 2020), 18쪽. 원제목은  
Rob Nixon, *Slow Violence and the  
Environmentalism of the Poor*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11).

11

발터 벤야민,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 『발터  
벤야민 선집 5』 (도서출판 길, 2008),  
336-337쪽. 필자가 번역 일부를 수정했음.

12

위의 책, 339쪽.

13

김홍중은 벤야민의 역사의 천사 우화에서  
인류세에 대한 매우 독창적이고 흥미로운  
해석을 제시한다. 인간 활동의 피해자인 자연이  
감수자(patient)에서 행위자(agent)로 바뀌고  
역으로 인간은 행위자에서 감수자로 전환하는  
교차점이 바로 인류세라는 것이다.  
김홍중, “인류세의 사회이론 1: 과극과 페이션시  
(patency),” 『과학기술학연구』 (2019), 19(3):  
1-49. 이 관점은 피해자 중심의 인류세 이해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한다.